

社会変動と集團現象－1960年代の日本の場合

東京大学 渡辺昭夫

1960年代の日本は、安保騒動－日米安全保障条約の改訂に反対する大衆的運動……に始まり一連の学園紛争に終る動乱の時代であった。このような集團的運動を特徴とする社会的騒乱が何に起因するものであったのか、そしてその終息はどのようにしてもたらされたのかが、この小論のテーマである。筆者は、このようなテーマを専門的に扱うことに慣れた政治社会学者ではないので、以下の議論はその時代に自己の三十代を過ごした一個の知識人としての立場から観察し考察した試論にすぎない。¹⁾

社会の表面に現われた集團現象という点から見ると、60年代の日本は激動の時代であった。その中でも、1960年夏の安保騒動と、60年代末の数年間に全国の大学を席捲した紛争とが目一つている。この二つの集團現象は、しかし、いろいろな意味で対照的な相違を含んでおり、それぞれが異なる時代の様相を示すものであると言えよう。したがって、以下、この両者の比較という視点から話をしてみたい。

結論を先に言えば、1960年の安保騒動は日本の歴史上「戦後期」と呼ばれる時代を象徴する一つの与件であった。それに対して60年代末の学園紛争は「戦後が終った」後にくる新しい時代……それを何と名づくべきかがそれ自体問題なのだが……の精神を象徴する事象である。安保騒動と学園紛争という二つの社会現象は、だから、「戦後期」と「ポスト戦後期」の全体的な特徴との関連で比較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ず、1960年の安保反対運動のきわだった特徴のいくらかを指摘しておこう。第一に、それはすぐれて政治主義的な運動であった。端的に言えば、その動機は反米ナショナリズムであった。左翼的反対派（マルクス主義）が運動の中心にあったが、彼らが広汎な支持を一般学生や一般市民から獲得できたのは、その共産主義革命理論によるというよりも、ナショナリズムに訴えたためであった。その場合、彼らのナショナリズムに目に見える

1) 山崎正和「おんりい・いえすたでい'60S」(文春文庫1985)は1960年代の日本についてのすぐれた同時代史的考察である。

対象を提供したのが、「米国」であり一切の米国につながりあるものであった。「日米安保保障条約」が、ナショナリズムという闘争にとっての赤い布であった。

米国がこの時代の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対象となったのは、「戦後期」の日本がいわば米国製であったことの必然的な結果であった。ヒロシマ・ナガサキに始まり、極東軍事裁判(東京裁判)と占領軍による日本管理を経て、1950～51年の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日米安全保障条約による「独立」にいたるまで、戦後日本における米国の存在は余りにも大きか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で1951年9月に締結された対日講和条約は、国際関係の歴史の中で見るとき、勝者(米国)と敗者(日本)との間に結ばれた条約としては、後に復讐心の種を残さないようにという配慮が強く作用したものであるとして評価できよう。²⁾にもかかわらず、講和後(1950年代)の日本の政治の主要テーマが反米ナショナリズムであったことは否めない。60年安保は、「民族の独立」をスローガンとする1950年代の様々な運動(内灘や砂川の米軍基地反対運動が最も顕著な例)との関連においてのみ理解可能であり、そうした運動の最後のクライマックスをなすものであった。

それでは何故、「民主か独裁か」といったスローガンが反安保運動の中で叫ばれ、日本の政治体制、いかえてみれば政治的正統性(legitimacy)そのものが問われたのか。その点で示唆的なのは、1960年の安保問題は政府側から見ても、国家の独立という観点からいって不満足な1951年の安保条約をより「対等」なものと改訂しようという動機に基くものであったという事実である。いわば、政府と反政府勢力は、いずれがより強くナショナリストイックであるかの競争をしていたのであり、日・米関係を基本的には維持しようとする政府がその競争で不利な立場に立性されたのは、致し方ないことであった。それに加えて「憲法問題」が介在した。

戦後の政治体制は1947年成立の新憲法に基礎をおくものであるが、その体制を支配し続けてきた自由民主党が憲法改正を党の綱領に掲げ続けながら、歴代の自民政権は憲法改正の意図を否定し続けるという異常な事態が存在する。一方、米国製の戦後日本を批判する反政府勢力が、憲法にかぎっては「戦後期」の積極的遺算としてその擁護を叫んできた。これは、新憲法が形

2) この点については渡辺昭夫「講和問題と日本の選択」、渡辺昭夫・宮里政玄編『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東京大学出版会, 1986), 1917-56を参照。

式上はマツカーサー元帥とGHQの作品でありながら実質上は日本人の伝統的な生活感覚に合致しているという二面性を持っていることに由来する。その上、第九条を撤廃しより明確 自 権の觀念に立った「再軍備」をすすめることが米国との関係でより「対等」な日本の地位を確立することになるという考えが自民党の一部にはあるが、反政府勢力側はそのような選択は対米独立というよりは対米従属であるとして攻撃することができる。その結果、自由民主党（およびその政権に基礎をおく政府）は、一方ではより明確な形で国民のナショナルリズムに訴える途を閉ざされ、他方では憲法に対する確たるコミットメントがあるのかどうかを他から疑われるという、二重の弱みを持つことになる。

この問題は現在にいたっても未解決であるが（ついでながら中曾根康弘の「戦後政治の総決算」はこの問題に決着をつけたいという動機から出ていると筆者は考えている）、時の政権がこの点に関して最も弱い立場におかれたのが、1960年の安保騒動をめぐってであった。その意味でそれは「正統性の危機」であった。

第二の特徴は、安保反対運動の主体がエリートであったという点にある。いわば、それは日本社会の「バスト・アンド・ブライチスト」によって指導された運動であつた。東京大学などのエリート大学の一流の学生が指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い。大学の教授陣も全体としては運動に同情的であった。そればかりか、一流の学者が雑誌『世界』その他の場で発表する文章が運動の理念を提供した。一流のメディアも、運動を支持した。安保改訂阻止という直接の目標は達成できなかったという意味では運動は挫折したが、この運動の指導者たちは社会の脱落者とはならず、やがて後に社会の指導的な北位につくことが少くなかった。いわば、社会の周辺ではなくその中心で展開されたのが60年安保という運動であった。

第三の特徴は、特殊日本的という意味でナショナルであったという点に求められる。先進のように「戦後日本」という特定の時代的環境と切りはないと60年安保は語れない。もちろん似たような状況におかれた社会で同様な現象は生じるかもしれないが、少なくとも、同時代においては、60年安保は孤立した（つまり日本だけで見られた）現象であった。

以上のような特徴を持った60年の安保反対運動と対比して、1960年代末

の大学紛争は、いずれも学生が主役であったという共通点はあるにせよ、はなはだ異なる性質のものであった。それはおそらく1964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前後を境として、日本社会が新しい時代に入ったことと無関係ではないと思われる。具体的には、この時期の学園紛争は政治主義的というよりもむしろ文化的現象ないし風俗的現象であり、その意味で生活主義的であった。確かに沖継問題があり「70年安保」が語られはし、その点で前の時代の課題を引きずってはいたが、そのような政治的課題は運動の中心テーマというより点景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言いかえれば、国民的なエネルギーを集中できるような具体的目標がなく、漠然として捉えどころのない不安や不満が過激な学生運動の心理的背景をなしていたのであって沖継問題や安保を学生運動家が好んで取りあげたのは、前時代の運動への彼らの憧れの表われであったとも言えよう、

60年安保を最後に、反米ナショナリズムを動機とする政治主義的運動が終息したのは、安保条約の改訂により完全ではないにせよ米国との「対等性」を獲得できたという政治的達成感、池田勇人内閣の所得増計画に象徴されるような高度経済成長の成果を享受しつつあるという経済的満足感、およびこれら二つの感情を土台にした「戦後日本」のナショナルな課題が一応成就したという心理的充足感が国民の間にゆきわたったためである。東京オリンピックは、日本国民のそのような充足感を社会の隅々にまでゆきわたらせた。後に「吉田ドクトリン」と呼ばれるような諸観念が定着したのは、この時代である。社会の表面における激動……学園紛争はその一つの表現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基底にある政治体制は日本の近代政治史上かつてないほどの安定性を見せた。池田・佐藤両政権の「静かな」政治がそのことをよく示している。

こうして安保後の(あるいはオリンピック後の)新しい時代は、手ごたえのある硬質のナショナルな目標がなく、そのかわりに漠然とした不安な気分が社会に弥漫していることを特徴としていた。このような不安感は、これまた日本の歴史上に例を見ないようなスピードで国民の生活様式が変化しつつあったが人びとの感覚がそのような急速な変化についていけないことの表われでもあった。TVの普及、核家族(夫婦と1~2名の子供から成る家族)化の進行、大量消費物質の氾濫、都市化の進行などが、このような社会的変化の表現である。このような変化の中で、旧来からの生活スタイルがくずれ

てゆき、万事にわたって「型」がくずれ「けじめ」が失われていった。こうして、目標の喪失感と生活様式の不定型化は、一方では新しい感覚やスタイルの登場を促がし価値観の多様化をもたらしたが、他方では、やり場のない不安と焦燥感にかられた過激ないし矯激な行動を噴出させた。この時期の学園紛争はその意味で、政治的というより文化的ないし風俗的現象であったと言えよう。それは量的・政治的イデオロギーの激突というよりは、貴なる生活感覚の間の関ぎ合いであった。

60年代末の学園騒動が60年安保反対運動のような求心的目標を欠き、むしろ拡散的な集团的噴出であったことは、運動のリーダーの性質における相違とも関係する。かつてのようなベスト・アンド・ブライチストによって指導されるというよりは、セカンド・ベストの中から指導者が出現した。そして彼らの運動の舞台は、彼らの日常生活の場であるキャンパスそのものであった。運動が街頭に出るときも、中心に向けて集約されるよりもむしろゲリラ的な拡散を特徴とした。運動の組織形態もヒエラルキー的というより、ネットワーク的であり、むしろ組織なき組織といった方がよい場合もあった。それは、学生運動だけでなくベトナム反戦運動のような市民運動にも共通する特徴であった。60年の安保反対運動が国政の中心である国会へと向けられたのに比べて、学園紛争がたとえば東大安田講堂を舞台としたという事実がきわめて示唆的である。確かに安田講堂は人びとの関心を集めるに定る象徴的存在ではあるが、権力の中心というには速く、その意味では周辺にすぎなかった。

運動のリーダーが中流であり運動の形態が拡散的であるということは、しかしながら、学園紛争が一部の過激な分子の運動であって広汎な支持を欠いていたことを意味しない、むしろ、先述したように、この時代の日本社会に弥漫していた漠然とした不安や焦燥感をこれらの紛争は表現していたので、たとえば大学の教授陣の中にも、学生運動家に共感を抱くかなりの層があった。大学の管理者たちがてこずったのは、まさしくこのような学生と造反教師との連携があったためである。大学が過激な運動の舞台となり正常な活動が不能になっても（1969年春の東京大学入学試験中止がそのよい表現である）職を失う怖れがないという条件が、選反教師のひとつの支えとなっていた。大学管理法が制定され（1969年8月）、国家による大学閉鎖措置が法的に可能となった結果、失職の怖れが生じたことが、紛争の鎮静化を促がす一要因

となったのは、そのためである。

学園紛争が安保騒動と異なる第三の点は、その無国籍性(コスモポリタンの性格)にある。前述のように、安保反対運動によってクライマックスに達する「戦後期」の学生運動は、日本の政治情勢に深く関連しておりその意味で特殊日本的であったが、60年代後半の学園紛争は同時代の先進国社会につうずる国境横断的な文化現象の一端であった。大量消費物資、マス・メディアをつうじてばらまかれる不定型で非人格的な情報……物心両面での供給の洪水の中で溺れてしまい方向感覚をともしれば失いがちな現代人の不安が、日本、米国、欧州を通じて共通の文明的問題を生じさせていた。東京オリンピック後の日本が急に外の世界との日常的な接触を拡大したことが60年代後半の学園紛争にコスモポリタンの性格を与えるうえである役割を果たし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日本人の関心は身近な対象から急に遠くのものへと拡散したのである。「ベトナム」が洋の東西を越えて学生運動や反政府的市民運動の共通のシンボルとなったことは、その点で、意味深い。

要するに、60年代後半の学園騒動は、日本人の心性や生活感覚に対しては後に残る影響を持ったという意味では決して無視できないが、政治体制の根幹を直接揺るがすものではなかった。安保騒動で揺れたのは国会であり、学園騒動で揺れたのは大学(そして一部の高校を含む学校)であった。一方は政治現象であり、他方は文化現象であった。前者では治安当局が自信を失いかけたり、政治指導者の信頼を失いかけたりするという場面があったがそれを踏みこたえることによって危機は回避された。後者では、自信を喪失しかけたのは文化的指導者としての大学教授であり大学当局であった。警察を導入することでキャンパスの当面の危機が收拾され、大学管理法という権力の支持を背景として造反教師の反乱を鎮静化させ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文化的現象は文化的解決にまたねばならない。大学教授の権威の回復は、教育の復興によってのみ可能であろう。

轉換期の 社會變動과 集團現象

— 1960年代 日本의 경우 —

와다나베 아끼오

1960년대의 일본은 안보소동—일·미 안전보장조약의 개정에 반대하는 대중적운동—으로 시작하여 일련의 학원분쟁으로 끝나게 되는 동란의 시대이었다. 이와같은 집단적운동을 특집으로 하는 사회적소란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종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일까? 또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본 연구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명하는데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테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데 익숙한 정치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술하게 되는 논의는 그 당시에 30대를 보낸 일본의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관찰하고 고찰한 시론(試論)에 불과하다.

사회외 표면에 나타난 집단현상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60년대의 일본은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60년 여름의 안보소동과 60년대 말의 수년 동안 일본 전국의 대학을 석권한 학원소요등의 주요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 두가지의 집단현상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대조적이며 서로 상이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시대적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이 양자의 비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해 보기로 한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1960년대의 안보소동은 일본의 전후 역사상 「전후기(戰後期)」라고 불리워지는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에 반하여, 60년대말의 학원소요는 「전후가 끝난」 뒤에 오는 새로운 시대—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겠지만—의 정신을 상징하는 일련의 사상이라고 하겠다.

* 日本 東京大學教授

안보소동과 학원소요라는 두개의 사회현상은 「전후기」와 「포스트·전후기」의 전체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비교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우선, 1960년의 안보 반대운동의 현저한 특징중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로, 그것은 매우 탁월한 정치주의적인 운동이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 동기는 반미 내셔널리즘이었다고 하겠다.

좌익적 반대파(막스주의)가 운동의 중심이었지만, 그들이 광범한 지지를 일반 학생이나 일반시민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셔널리즘에 호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경우, 그들의 내셔널리즘에 현저한 대상을 제공한 것이 미국이었으며 모든 것이 미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즉, 「일·미안전보장조약」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투우경기에 있어서의 빨간보자기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다.

미국이 이당시 일본의 내셔널리즘의 대상이 된 것은 「전후기」의 일본이 말하자면 미국의 신물이었다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으로부터 시작하여, 극동군사재판(동경재판)과 점령군에 의한 일본관리를 거쳐서 1950년~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미안전보장조약에 의한 「독립」에 이르기까지, 전후 일본에 있어서 미국의 존재는 너무나 큰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1951년 9월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은 국제관계사라고 하는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승자인 미국과 패자인 일본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조약으로서 후일에 복수심의 씨앗을 남기지 않으려는 배려가 크게 작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후(1950년대)의 일본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반미 내셔널리즘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1960년의 안보는 「민족의 독립」을 슬로건으로 하는 1950년대의 각종 운동(예를들어, 우찌나다나 스라가와와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가장 현저한 예라고 할 수 있음)과의 관련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가능한 것이며, 그와같은 운동의 최후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민주이냐 독재이냐」라고 하는 슬로건이 반안보운동의 와중속에서 일컬어졌으며, 일본의 정치체제, 말을 바꾸면, 정치적 정통성(Legitimacy) 그 자체가 문제시 되었을까?

이러한 점에서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60 년대의 안보문제는 정부측에서 본다면 국가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불만족스러운 1951 년의 안보조약을 더욱 「대등」한 것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정부와 반정부세력은 어느 쪽이 더욱 강렬하게 민족주의적인가 하는 경쟁을 하고 있었으며, 일·미관계를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자 한 정부가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는 「헌법 문제」가 개재하였다.

전후의 정치체제는 1947 년에 성립된 신헌법에 기초를 두는 것이었지만, 그 체제를 지배해 온 자유민주당이 헌법개정을 자당의 강령에 계속 포함시키면서도 역대의 자민당정권은 헌법개정의 의도를 부정했다고 하는 모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미국의 산물인 전후 일본을 비판하는 반정부세력은 헌법에 한정시켜 볼 때, 전후기의 적극적인 유산으로 일컬어 왔다.

이는 신헌법이 형식적으로는 맥아더 원수와 GHQ의 작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의 전통적인 생활감각에 합치하고 있다는 이면성을 갖고 있음에 유래한다.

뿐만 아니라, 제 9 조를 철폐하고 더욱 명확한 자유권의 관념에 의거하는 「재군비」를 추진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대등한 일본의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하는 발상이 자민당의 일부에 있었다. 하지만, 반정부세력측은 그와같은 선택은 대미독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대미종속이라는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당(및 그 정권에 기초를 둔 정부)은 한편으로는 더욱 명확한 형태로 국민의 내셔널리즘에 호소하는 길이 막혔으며, 또 한편으로는 헌법에 대한 확실한 코미트먼트가 과연 있는 것인지 타인으로부터 의혹을 받게되는 이중의 나약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미해결인 바(나카소네 수상은 「전후 정치총결산」 논리는 이 문제에 결착을 보겠다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당시의 정권이 이 점에 관하여 매우 위약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 1960 년의 안보소동을 둘러싼 상황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정통성의 동기」라고 하겠다.

제 2 의 특징은 안보반대운동의 주체가 엘리트였다고 하는 점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본사회의 「Best and Brightest」에 의하여 지도된 운동이었다.

동경대학 등 엘리트대학의 일류학생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대학의 교수진도 전반적으로 운동에 동정적이었다. 그 뿐만아니라, 일류학자의 잡지 『세계(世界)』라든가 그외의 매개체에서 발표하는 문장이 운동의 이념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었다. 일류 미디어도 또한 운동을 지지하였다. 비록 안보개정의 저지라고 하는 직접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운동은 좌절되었지만,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사회의 탈락자가 되지 않고 드디어 후일에 이르러서는 사회의 지도적인 지위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였다. 말하자면, 사회의 주변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전개된 것이 60년대 안보운동이었던 것이다.

제3의 특징은 특수일본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족적이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후 일본』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대적 환경과 분리하여 60년안보를 논할 수는 없다. 물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회에서 동일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60년안보는 고립된 말하자면 일본에서만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는 60년안보반대운동과 비교하여 1960년대말의 대학분쟁은 양자 공히 학생이 주역이었다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매우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는 64년의 동경올림픽 전후를 계기로 하여 일본사회가 새로운 시대에 돌입하였다는 것과 무관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기의 학원분쟁은 정치주의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문화적현상 내지는 풍속적 현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는 생활주의적이라고 하겠다.

확실히 오키나와문제가 있었고 「70년안보」가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외교관계를 포함하고는 있었지만 그와같은 정치적과제는 운동의 중심테마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변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다. 말을 바꾸면, 국민적인 예νε로기를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라 막연하게 인식된 불안과 물만이 과격한 학생운동의 심리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다. 오키나와 문제나 안보문제를 학생운동가가 기꺼이 다룬 것은 전시대의 운동에 대한 그들의 동경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60년 안보를 끝으로 하여 반미 민족주의를 동기로 하는 정치주의적 운동이 종식한 것은 안보조약의 개정에 의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과의 대등성을 획득

하였다고 하는 정치적 달성감, 이께나 내각의 소득배증계획에 상징되는 것과 같은 고도경제성장의 성과를 향수한다고 하는 경제적 만족감 및 이와같은 두개의 감정을 토대로 한 「전후 일본」의 민족적인 국민과제를 성취하였다는 심리적 충족감이 국민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64년의 도쿄올림픽은 일본국민의 그와 같은 충족감을 사회저변에까지 뻗게 하였다. 나중에 「요시다 학트린 (Yoshida Doctrine)」이라고 불리워지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이었다.

사회의 표면적인 격동 — 학원분쟁은 이러한 표현중에 하나이었다 — 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던 정치체제는 일본의 근대정치사상 일찍기 유래가 없을 정도의 이께나·사토 양정권의 「조용한」 정치가 이를 의미하고 있다.

이리하여 안보투쟁후의 (또는 올림픽이후의) 새로운 시대는 가벼운 경철의 민족적 목표가 아니라 막연하고도 불안한 기분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이와같은 불안감은 이 또한 일본의 역사상 예를 볼 수 없는 속도로 국민의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대 감각이 그와같은 급속한 변화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텔레비전의 보급, 핵가족 (부부와 1, 2명 정도의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가족) 화의 진행, 대량소비물자의 보급, 도시화의 진행 등이 이와같은 사회적 변화의 표현이었다. 이와같은 변화속에서 지금까지의 생활스타일이 바뀌어지고 만사에 걸쳐서 그 형태가 이그러지고 확실한 매듭을 잃고 있었다.

이와같이 하여 목표의 상실감과 생활양식이 부정형 (不定型) 하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감각이나 스타일의 등장을 촉구하며 가치관의 다양화를 초래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불안과 초조감에 쌓인 과격하고도 급격한 행동을 분출시켰다.

이 시기의 학원분쟁은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화적 내지는 풍속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그것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격돌이라고 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생활감각간의 상호 투쟁이었다.

60년대 말의 학원사태가 60년 안보반대운동과 같은 구심점 목표를 잃고, 오히려 확산적이고도 집단적 분출이었다고 하는 것은 운동의 주동자의 성질상의 차이점에 관련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은 「Best and Brightest」에 의하여 주도된다고 하기 보다는 「Second Best」 중에서 지도자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운동무대는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인 대학캠퍼스 바로 그것이었다.

학생운동이 가두로 전개될 때에도 행동의 중심을 향하여 집약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계급적인 확산을 특징으로 하였다. 운동의 조직 형태도 계급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서포조직적이었으며, 오히려 조직이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학생운동 뿐만 아니라 월남 반전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에도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60년의 안보반대운동이 국내정치 중심인 국회에 향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학원분쟁이, 예를들면 동경대학 아스다강당을 무대로 하었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시사적이다.

확실히 아스다강당은 지식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상징적 존재이긴 하지만, 권력의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멀었다. 그런 의미에서 주변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운동의 주동자가 중류층이며 운동의 형태가 확산적이라고 하는 점은 학원분쟁이 일부 과격분자의 운동이며 광범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당시의 일본사회에 팽배하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이들 분쟁은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진에서도 학생운동가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상당한 층이 있었다.

대학의 관리자들이 관심갖는 것은 말하자면 이와같은 학생과 일부 교수들과의 연계 내지는 지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과격한 운동의 무대가 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도(1969년 봄의 동경대학 입학시험 중지사태가 그 좋은 표현이라고 하겠다) 직장을 잃어버릴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조건이 교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었다.

대학관리법이 제정되어(1969년 8월), 국가에 의한 대학폐쇄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된 결과, 실직의 두려움이 생긴것이 분쟁의 진정화를 촉구하는 요인이 된 것은 바로 이때문이라고 하겠다.

학원분쟁이 안보소동과 다른 제3의 점은 그 무국적성(코스모폴리탄적인 성격)에 있다.

전술한 바와같이, 안보반대운동에 의하여 클라이막스에 달한 「전후기」의 학생운동은 일본의 정치 정세에 깊이 관련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특수 일본적이기도 하였지만, 60년대 후반의 학원분쟁은 동 시대의 선진국사회에 통하는 국경

횡단적인 문화현상의 일단이었다.

대량소비물자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알려지는 부정형하고도 비인격적인 정보·불심양면으로 공급의 홍수속에 빠져버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기 쉬운 현대인의 불안이 일본, 미국 그리고 구주를 통하여 공통적인 문명문제를 생성시켰다.

동경올림픽이후의 일본이 갑자기 외부세계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확대시킨 것이 60년대 후반의 학원분쟁에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준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일본인의 관심은 가까운 곳에서 갑자기 먼 곳으로 확산한 것이다.

월남이 동서양을 넘어서 학생운동이나 반정부적 시민운동의 공통적 상징이었던 것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깊다고 하겠다.

요컨대, 60년대 후반의 학원소동은 일본인의 심리라던가 생활감각에 대하여서는 나중에 남게되는 부작용과 휴유증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정치체제의 근간을 직접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안보소동으로 동요된 것은 국회이며, 학원소동으로 동요된 것은 대학(그리고 일부의 고교를 포함한 학교)이었다.

한쪽은 정치현상이었으며, 또 한쪽은 문화현상이었다.

전자에서는 치안당국이 자신을 잃고 정치지도자의 신뢰를 잃게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이와같은 과정을 통하는 것으로서 위기가 회피될 수 있었다.

한편, 후자에 있어서는 자신을 상실하게 한 것은 문화적 지도자로서의 대학교수이며 대학당국이었다.

경찰을 투입시키는 것으로서 대학캠퍼스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가 수습되고 대학관리법이라는 권력의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일부 교수들의 반란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현상은 문화적 해결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교수들이 갖는 권위의 회복은 교육의 부흥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